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I-01 > (정의비율)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행사하는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한편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해결하는 일체의 과정을 정치로 본다.

-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치로 본다.
입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
국가 형성 이전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부정한다.
다양한 사회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자체적으로 조정 해가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comment) 틀린 건, 큰 의미에서 보면 맞지만, 평문 매우 쉬웠음

3. 표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I-02) (☆☆)

Table with 3 columns: 구분, 관련 헌법 조항, 실현 방안. Rows include (가) and (나) with correspond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methods.

- (가)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평생 교육 진흥'이 들어갈 수 있다.
A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B는 A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B는 A와 달리 여성 및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II-01 (☆) 감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표는 각국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with 3 columns: 구분, 감국, 을국. Rows show legislative and executive checks.

- (가)에는 '의회 해산권'이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탄핵 소추권'이 들어갈 수 있다.
감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견제할 수 있다.
감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다.
을국에서는 감국과 달리 의회 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법 개정, 국민의 청원권 대폭 강화. 그동안 청원을 하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문라인 제출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 ㉠이 활성화될수록 청정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가능성은 약화된다.
㉡은 정치 과정 중 산출에 해당한다.
㉢을 통해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이 완화될 수 있다.
㉢은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를 축소시킨다.
㉢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I-01 (☆) 역사적으로 법치주의의 의미는 A에서 B로 확장되었다. A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 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헌법의 가치 체계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B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B의 정신은 법과 제도에 투영되어 있다. 가령 죄형 법정주의의 과정 원칙 중 하나인 정죄의주의는 B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법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죄형 법정주의는 B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A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B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재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B는 A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가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보호적 기능은 강화된다.
(나)는 사안에 적용할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comment) 법은 @범죄자 하겠음, 두어 판의 화는, 5도 한번한 방향 vs 보. 원근 계! Tip) (가)를 보, (나)를 보

정치와 법

## 2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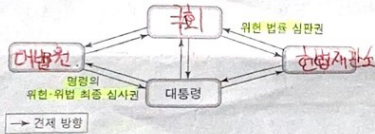
6. (가)~(다)는 기본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나)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다)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다)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수단의 적합성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comment) 기본 단원 ①번지 보거나 쪽도 무방, 나부 명문이라...

7. 그림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 간 전체 관계를 나타낸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 하나이다.) [3점] **<★>**



- ① A의 장(長)은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② B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C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부의 제소가 있을 때 그 정당의 해산 심판을 담당한다.  
 ④ C가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⑤ B의 장(長)과 달리 C의 장(長)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3점] **<★>**

○ ○ 국립공원 주변 관광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B를 찾아가 관광 업계의 숙원 사업인 ○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하루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한편 100여 개국의 시민들이 연대한 환경 보호 운동 단체인 C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자 공청회를 열었다.

- ① A는 정권을 획득하여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② B는 공직 선출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③ A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④ C는 A와 달리 소속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킨다.  
 ⑤ C는 B와 달리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comment) 정권 획득과 실현 운동!!

9. 다음 자료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

- (가) **<자유권>**  
 ■ 주요 입장  
국제 사회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사례  
○ ○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채택함.
- (나) **<헌법권>**  
 ■ 주요 입장  
국제 사회는 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시함.  
 ■ 사례  
○ ○ 15개 이상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 ○국의 화학 무기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됨.

- ① A는 유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 연합의 최고사 결정 기관이다.  
 ② B에서 △△국은 실질 상황을 제외한 안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A와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가)는 (나)와 달리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comment) A는 유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 연합의 최고사 결정 기관이다. B에서 △△국은 실질 상황을 제외한 안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와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가)는 (나)와 달리 국제 사회가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나)는 (가)와 달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고등학교 갑과 을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 ○ 백화점 사장 병과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근로 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이다.

- 근로 기간: 2021년 1월 6일~2021년 2월 28일
- 근로 시간: 10시~18시(휴게 시간: 13시~14시)
- 근무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 휴일: 매주 월, 화요일
- 임금: 시간당 8,000원

\* 2021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

표는 갑과 을이 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서류 들을 비교한 것이다.

구분	갑	을
취직 인허증	×	○
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① 을의 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을 을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과 달리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적으로 금지된 근로시간을 변경해 볼 수 있다.  
 ③ 근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갑은 병에게 법정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을과 병이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병은 을을 1일 2시간씩 더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⑤ 갑은 을과 달리 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comment) ①번지의 뉴시이 2년 전 개명권 파면! 아! 4도 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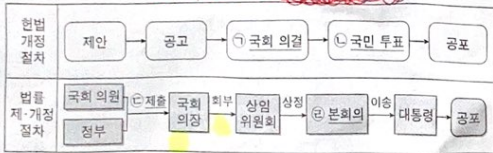
1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각 지방 자치 단체의 ㉠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A가 ㉡ 예산안을 편성한다. 편성 후 제출된 예산안 ~~신뢰~~ 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체~~ 집행한다.

- ① 주민은 ㉠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권한
- ② ㉡은 주민 대표를 통해 ~~신~~ 최종 확정된다.
- ③ A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 ④ B의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분된다.
- ⑤ A는 B와 달리 담당 사무에 관하여 ㉠을 제정할 수 있다. A는 '국회'

comment) 은 부흥 지방자치. 조항지.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국회 의원 선거권자는 ㉢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다. (O)
- ㉣ 정부의 ㉢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 교섭단체는 제출된 법률안을 ㉢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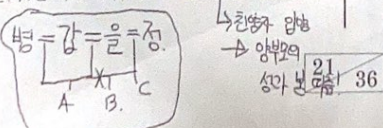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남)과 을(여)은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면서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한편 갑은 병과, 을은 정과 법률상 혼인하였고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그 후 ㉠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A-C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미혼이며 재자가 없다.  
\*\* 갑-정의 성(姓)과 본(本)은 모두 다르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필수~~ 그 ~~효력~~ 발생한다. 재판 '직권'
- ② ㉠ 이후에도 병은 A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정권
- ③ ㉠ 이후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병은 을과 ~~정~~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정
- ④ ㉡ 이후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정은 갑과 달리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정
- ⑤ C가 정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 경우, ㉢으로 인해 B는 정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정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다)는 범죄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A, B 중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아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단, A와 B는 각각 위법성과 책임 중 하나이다.

- (가) 갑(22세)이 장난으로 친구의 애완견을 발로 건어찬 경우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경찰관 을(43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위법 인정되지 않아 체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년
- (다) 병(51세)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과~~ 인정되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

- ① ~~가~~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구성요건
- ② ~~나~~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구성요건
- ③ ~~다~~는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구성요건
- ④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구성요건
- ⑤ 자신의 ~~과~~에 힘입어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이다. A

comment) 수가는 묻지.

틀렸으면 심의 반성하고  
거말록 따라.

15.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갑(18세)은 온라인 게임을 위하여 을(30세)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였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다.

(나)

질문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계약 당시 병의 동의를 있었는가?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계약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계약 후 병이 추인하였는가?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 ㉠ <상황 1>에서 을의 사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은 ㉡ 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미성년)
- ㉢ <상황 2>에서 갑이 병의 동의를 위조하는 수임수로 계약을 하였다면 갑뿐만 아니라 병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
- ㉣ <상황 3>에서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취소권
- ㉤ <상황 4>에서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의사 표시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comment) 재산 관계 정할 더 이상 없다. 관계 파악을 위한!

# 4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16. 표는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과 적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	적용 사례
(가) <b>소유권</b> (가)	정부는 자연 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토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나)

- ① (가)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② (가)에 따른 행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의도하거나 자신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③ (가)에 따라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 ④ (나)에 따른 법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돈을 빌리는 계약에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제조물 제조상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다.'가 들어갈 수 있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9세)은 을(35세)이 운영하는 결혼 사진 촬영 업체에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어느 날 병(30세)이 을에게 자신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고, 갑은 그 촬영을 위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결혼식장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병(47세)을 크게 다치게 하였다. 그리고 사고 처리 때문에 병의 결혼식 사진은 촬영되지 못했다.

- ① 촬영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② 촬영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 ③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을의 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병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손해와 동일 수준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병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으나 일주일 후에 검거되었다. 갑, 을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갑, 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기말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갑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을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을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를 포기하였다.

- ① 갑은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을이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은 확정된다.
- ③ 을은 형 집행 도중에 보석 제도를 통하여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다.
- ④ 병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므로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갑, 을 모두 형사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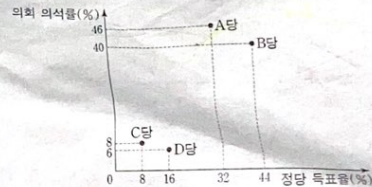
◎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하나인 A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당 1점, 총 3점)

질문	정수
1.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에 비해 권을 가진다.	2점
2. 국제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가)	

- ①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③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④ 명시적 인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⑤ 체결에 참여한 행위 주체에 대해 재판 구속력을 지닌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70인과 비례 대표 의원 30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지만 공천하며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갑국은 현재의 의원 선출 방식과 지역구 의원 수는 유지하되, 비례 대표 의원 수는 늘려서 전체 의원 수를 현재의 1.5배가 되도록 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한 연립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 적용 시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① 현재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② 최근 선거 결과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의 2배이다.
- ③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 의석수와 B당의 의회 의석수는 같다.
- ④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정당 득표율과 C당의 의회 의석률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최근 선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에도 B당과 D당만으로는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없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